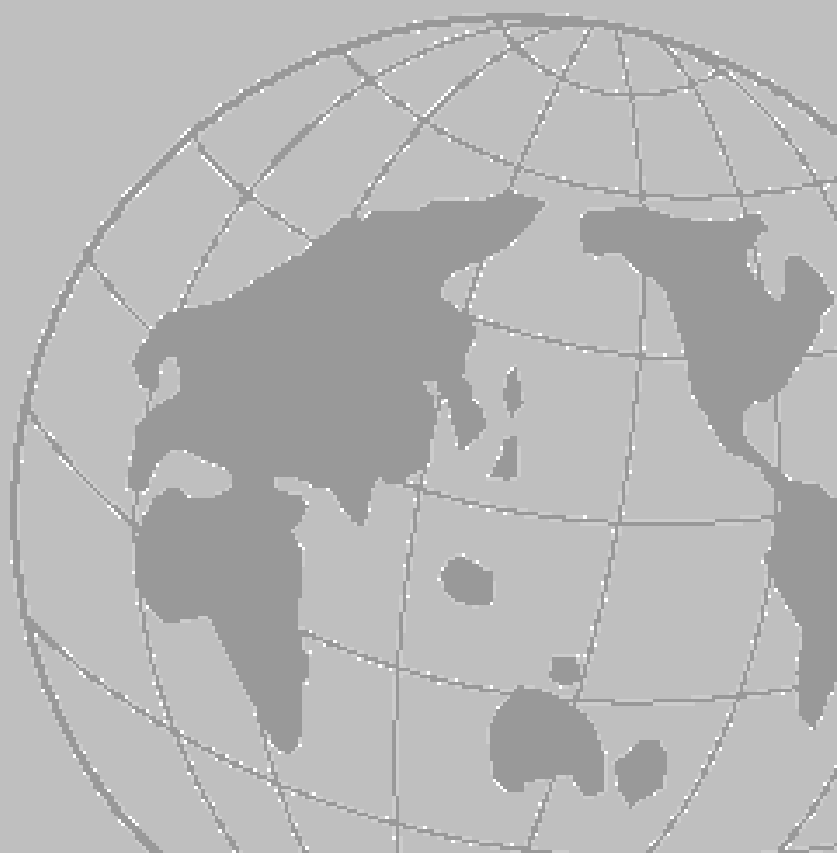


특별기고



천안함 사건과 안보리 제재

박 수 길*

북한 잠수함에 의한 천안함 폭침사건이 일어난 지 이미 3개월이 지났다. 우리 영해를 몰래 침범해 해군 군함을 어뢰로 폭파하여 46명의 젊은 해병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북한이 유엔헌장, 한국휴전협정,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위반한 범죄로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도발이다.

올해는 6·25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이지만,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는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천안함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이래 자행된 북한 특공대 청와대 습격사건(1968년), 버마 아웅산 테러사건(1983년), 88올림픽 방해 목적의 KAL기 폭파사건(1987년) 등은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들이지만, 천안함 사건은 우리 영해에서 한국 군함을 공격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전쟁행위이다.

지난달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외국 전문가가 포함된 민군합동조사단의 보고로

발표되자 우리 국민의 충격은 물론 국제 사회의 반응도 예상외로 강력하고 신속했다. 현재까지 무려 80여 개국이 넘는 나라들과 유럽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 미주국가연합 등이 북한의 잔혹한 행위를 규탄했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G8 정상회의도 북한을 규탄하는 대열에 가담했다. 특히 반기문총장의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표명은 그가 한국인이기 이전에 유엔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지난 5월 유엔기자와의 정례회견에서 국제적 성격의 민군합동조사단이 내놓은 사실과 증거는 대단히 “강력하고 압도적”(compelling and overwhelming)이라고 단정하고 “유엔안보리는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남북교역중단, 북한선박의 한국해역 통과 불허 등 일련의 대북제재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천안함 사건을 안보리에 제기, 제재결의 채택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백방으로 전개하고 있다.

* 유엔협회세계연맹 회장, 고려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전 주 유엔대표부대사

그러나 안보리에서의 결의안 채택에는 거부권을 가진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태도는 조심스러운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부터 사건의 진실을 때로는 시인하는 듯한 인상도 주고 있다. 5월 말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은 후진타오 주석에게 북한의 무관함을 주장했을 것이 명백하고 또 북중 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중국의 태도가 신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지금까지 중국정부는 단 한번도 합동조사단의 최종보고에 의견을 제기한 바가 없고, 또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달 말 제주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중 중국은 “정의를 실현하는 책임있는 당사자”로서의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제의로 한국에 파견된 러시아 조사단은 한국에서의 조사를 완료하고 이미 귀국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러시아 정부의 입장이 조사단의 결과보고와 다를 수 있다는 데 있다. 러시아는 외교안보 문제에 대하여 중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등거리 외교를 추구함으로써 영향력 증대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안보리에서의 천안함 사건처리에 있어서 중국과 같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많다. 토론토 G8 정상회의가 러시아의 유보적인 태도로 인하여 북한이 천안함 폭침사건에 직접적 책임자임을 다소 우회적으로 표시, 규탄한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나는 1996~1997년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었을 때, 유엔대표부 대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안보리는 강대국의 권력정치와 이상주의가 교차, 작용하는 국제정치의 현장임을 잘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안보리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결의를 채택하는데 있을 것이나,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1996년 9월 북한 잠수함 동해안 침투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동해안 강릉 근해에서 북한 잠수함이 좌초된 채 발견되었으나, 26명으로 추산되던 북한 특수부대와 잠수함 승무원이 강릉근처 산속으로 탈출한 사건이다. 북한 특수부대원들은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잠수함 승무원을 무자비하게 총살한 후 산속으로 도주했으나 한국군에 의하여 대부분 사살되었고 아측의 사망자도 7명이나 되었다.

한국은 이 사건을 안보리에 제기했으나, 북한은 북한 잠수함이 훈련도중 엔진고장으로 표류한 사건이라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했다. 우리는 안보리에서 구체적인 증거로 중국을 설득하여, 문맥상 북한에 대한 경고성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그 성명에는 우리가 주장한 잠수함의 “침투” 등의 용어는 빠지고 사건에 대한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와 “휴전협정의 전면적인 준수” 등의 표현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의장성명 채택 후 2여개월이 지난 그 해 12월 말 북한은 이례적으로 사과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배경에는 안보리 성명

으로 북한의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또 당시 북한의 절박했던 식량난 해소를 위한 한미 양국의 지원확보와 1994년 타결된 제네바 합의에 기초한 북미관계 증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처음부터 의장성명 수준의 대응은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한국측과의 교섭에 임했으나 단 한번도 북한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는 점은 이번 천안함 사태에 대한 중국의 태도와 유사하다.

현재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이 안보리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외교적 목표는 북한제재 결의이다. 그러나 중국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은 안보리에서 일정수준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북한과의 특수관계를 고려하여 결의안 대신 의장성명을 선택하려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다른 한편 미국과 주요 서방국가도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지지 획득과 중국의 기권 속에서 채택되는 결의는 북한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주는 경고가 될 수 없을 것이므로, 차라리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발표하는 의장성명이 북한에 보다 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표시하고 있다.

천안함 사태에 관한 협의가 안보리사회 안팎에서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이 의장성명과 결의안의 양자택일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은 타협의 가능성을 더욱 높게 하고 있다. 서양 격언에 “최선의 추구가 차선도 잃게 한다”는 말도 있지만, 형식이 의장성명이

라고 해서 그 중요성이 꼭 결의에 못 미치는 것은 아니다. 나는 현 상황에서 의장성명으로 천안함 사건의 타결 가능성이 많다고 보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성명문안에 첫째, 어떤 방법으로도든지 북한을 명백히 지칭하는 구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과 둘째, 피해자인 한국과 북한에게 도덕적 등가성을 부여하는 듯한 구절이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피해자이고 북한은 가해자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현 상황에서 중국 당국에 꼭 한 가지 우정어린 충고를 하고자 한다. 지난번 토론토 G20정상회의에 참가한 후진타오 주석은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간나오토 일본 수상 등과의 개별면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떤 행위도 규탄하고 반대한다”고 말하고 안보리 협의과정에서의 협조를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한국이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행사를 자제하면서 유엔헌장상 국제평화와 안전에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안보리에서 외교적, 법적 절차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중국의 태도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냉철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토론토 한미정상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시절 미국과 합의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시점을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합의의 배경에는 2012년이 김 일성 생일 백년을 기념하는 북한의 강성 대국 건설,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그 해 한국, 미국, 중국 정치지도자들의 교체 등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가 원인이었으나, 천안함 침몰사건이 촉진제가 되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 25일 한국전쟁60주년 행사연설에서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평화적 통일”이라고 말하고 “북한은 천안함 도발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 사과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점에 귀를 기울려야 할 것이다.

끝으로 천안함 폭침과 같은 중요 안보 사건에 대해서조차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우리 정치권의 현실에서 외

교안보문제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구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러나 외교, 안보정책에 투영되는 이념의 과잉은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정치권은 공허한 이념이 아니라 안보·경제·국력의 제고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치와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이룩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치권 초미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정치권에 묻고 있다. 미국의 상하양원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대북규탄결의를 채택한지 2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분노하고 있다. 다수결이 민주주의 기본원칙이라고 하지만 우리국민은 천안함사건 같은 중대한 안보문제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싶다.

외교